

국가경쟁력과 구성된 위기: 몰락의 이야기로서의 '국가경쟁력 위기론'

정병걸*

국가경쟁력은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과 이들의 지원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이들이 규제 철폐와 경제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집권하여 특별히 경제적 위기로 불릴만한 문제가 없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근거로 정부와 정부에 의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고 친기업적 정책 편향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구성된 위기'이다.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과장하는 '몰락의 이야기'를 통해 정부와 정부규제를 악한으로 낙인찍고 기업은 영웅으로 묘사함으로써 친기업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정책 편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제어: 국가경쟁력, 구성된 위기, 몰락의 이야기

I. 들어가는 말

정치적 현실의 대부분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집단이나 미디어가 창출한 '환상의 결합'이며 정치 자체는 '중개된 정치적 현실'(mediated political realities)이라는 주장(Nimmo & Combs, 1990. 박선희, 2002: 210 재인용)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최근 논의에서 멀어졌지만 2000년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양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 과학기술과 위험 등이다(bkjung@dyu.ac.kr).

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국가경쟁력 위기론’도 현실 그대로가 아닌 중개된 현실일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행정과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은 매우 자주 언급되었다(예: 서창록, 1993; 이용현, 1994; 우천식·서경란, 2003; 전수봉, 2004; 정광조, 2005; 조병구, 2006). 국가경쟁력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급속한 추격에 미국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이다. 미국이 처한 위기의 궁극적 원인이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저하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던 것이다(이정우, 2005: 282-283). 이후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동시에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와 기업의 목표는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의된 경쟁력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론도 존재한다(윤희운, 2007: 106). 국가 경쟁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Krugman, 1994).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목표로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논의는 경제에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외연을 확대해 왔다(이용현, 1994: 288). 산업 경쟁력의 국가간 비교의 성격이 강한 기업 중심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국가의 전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은 경제(이영면, 2004; 이정우, 2005), 정치(조정관, 2006), 행정(김형기, 2003; 윤광재 외, 2005; 최진욱, 2006), 교육(김천기, 1994), 과학기술(김정민·전영서, 2001; 윤희운, 2007)과 정보화(윤상오, 2000)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국가적 목표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행위자들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까지 포함한 가능한 최대 다수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논의가 모두의 이익을 포괄적이고 균형

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문제 원인이거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0년대 초중반의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외환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오히려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외환 위기가 거의 극복되었으며 경제적 위기라고 할만한 특별한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위기가 특정한 의도에 의해 구성되었거나, 의도적 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한 주장을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제기되었는가? 어떤 상황이 위기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존재해야 하며 문제 규정은 특정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주장하는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경우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실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실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특정한 이해관계나 입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본다. 물론 국가경쟁력과 위기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한 의도가 반영됨으로써 문제와 문제의 원인, 해결책이 특정한 이해관계나 관점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왜곡 혹은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사용의 맥락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며, 위기론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정치경제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개념의 편향적 활용이 초래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Ⅱ. 국가경쟁력, 위기와 문제 규정

1.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은 미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국 대통령

산업경쟁력위원회(U.S.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국가 경쟁력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세계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현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며 미국과 일본은 코카콜라와 펩시가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한다는 것이다(Krugman, 1994). Porter(1990)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경쟁력'에 대한 논의 범위가 기업수준을 넘어서서 산업은 물론 국가 단위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이정우, 2005: 282-283).

원래 국가경쟁력은 산업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국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장과 변형의 수준을 규정하는 요소, 정책, 제도의 집합체(총화)'로 정의할 수 있다거나 '세계의 복잡 다양한 경제 환경에서 자국민의 지속적인 생활수준을 담보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 또는 역량'(윤희윤, 2007: 107)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 개념이 등장한 초기부터 국가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조동성, 1992; 서창록, 1993).

국가경쟁력은 미시적 용어인 경쟁력과 국가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범용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일국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고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국가는 기업과는 상이한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거나 혹은 학문적으로 정의, 분석될 수 있는 단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의된 경쟁력은 무의미하거나 위협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우천식·서경란, 2003: 6).

Krugman(1994)은 국가 경쟁력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자로 국가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국가경쟁력은 학문적 근거나 정책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산업 수준의 경쟁력과 혼동했다는 비판(Davies & Ellis, 2000)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쟁력을 통해 비교하고,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국가경쟁력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유동적(삼성경제연구소, 1994: 54-61)이며, 실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곤란한 이유는 국가와 경쟁력이라는 추상적 실체와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의미 해석에 있어서 혼동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약 특정한 입장의 행위자나 집단이 개념 사용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경우 이러한 모호성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상징이 지닌 모호성이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Cohen, 1976) 개념적 모호성이 오히려 수용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의미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이를 근거로 한 특정한 주장을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우 더욱 강한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국가라는 초월적 이미지의 존재와 연계시킴으로써 특정한 관점이나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기 구성과 문제 표현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문제 발생의 상황은 위기로 규정되기도 한다. 위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중대한 변화(Jackson, 1976: 210)로 정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다. 위기는 체계에 중대한 위협과 손실을 주어 목표달성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김형렬, 1987: 67). 체계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한 변화가 필요하다²⁾(Harrald, Lee, Jeong & Kim: 1998: 252).

위기의 중요한 원천은 자연 재해, 인위적 재해나 사회적 갈등 등(노화준, 1991: 124-126)이지만 위기가 반드시 외부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의도

2) 위기의 위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형렬, 1987: 67).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 위기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Ulmer & Sellnow, 2000: 143).

적으로 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외부적으로 주어진 위기와 달리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가 이에 해당한다(Pitt, 1990; Kim, 1998).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확대, 문제 상황으로부터의 탈피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위기가 의도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위기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문제 규정은 단순히 이상적 목표 상태를 규정하고 목표와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목표는 고정되거나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기도 한다.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집단이나 조직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개념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 때 문제 규정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묘사라기보다는 전략적 표현이며 경쟁적 이익간의 다툼으로 묘사할 수 있다(Stone, 1988: 106).

모든 사회적 현상이 그렇듯 문제의 존재만으로 상황이 위기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할만한 문제 인식을 필요로 한다. 현실이나 실재(reality)는 주어진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것(Berger & Luckman, 1967)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누구의 입장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위기와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의 성격은 전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정치의 세계에서 현실이나 실재는 주관적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묘사된다. 특히 구성된 위기 상황과 같이 위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입장을 반영하여 특정한 문제나 문제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특정한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문제 표현이나 강조를 위해 특정한 개념이나 용어가 사용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number)가 제시되기도 한다(Stone, 1988). 예를 들면, 공익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나 내용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의미를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하게 규정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정한 용어나 개념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때로는 의도적인 왜곡

이나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과학적 연구가 강조되는 학술 연구에 있어서도 특정한 개념의 의미가 축소,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통념화된 편견의 프리즘을 통해 상대의 패러다임을 보게 됨으로써 통념화된 편견이 과학을 압도하고 마침내 사실과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오류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한다(정진홍, 1991: 316).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할 뿐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희석하고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정진홍, 1991: 327).

3. 문제 규정의 담화 구조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 규정은 행위자의 위치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대한 대응 행위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들의 기본적 가정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상황 인식은 문제에 대한 상이한 대응 행위의 선택을 유도한다. 문제 규정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전략적인 표현이다(Stone, 1988: 106). 따라서 누가 문제를 규정하고 제기하는가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해결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정책 문제 규정은 대개 시작, 중간과 결말이 있는 이야기인 담화식 구조(narrative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문제 규정에는 영웅(heroic), 악한(villain)과 무고한 희생자(innocent victim)의 드라마가 있으며 악의 힘과 선의 힘이 맞서 싸우는 것으로 묘사된다. 정책 문제 규정에 있어서는 '몰락의 이야기'(story of decline)와 '통제와 무기력의 이야기'(story of control and helplessness)라는 두 가지 종류의 줄거리(story line)를 가진 이야기가 널리 사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tone, 1988: 109-116).

'몰락의 이야기'는 상황이 악화되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시된다. 대개 파괴나 파멸과 같은 위기의 예측과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이때 제안은 "만일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식의 경고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몰락의 이야기는 상황의 악화를 보여주기 위해 거의 대부분 사실이나 수치(예: 무역수지 악화, 범죄율 증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몰락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처음에는 아주 나빴지

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사용하는 이야기이다³⁾. 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혹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인 ‘이전 이야기의 수정’(revision of an earlier story)도 자주 사용된다.

‘통제와 무기력의 이야기’는 대개 “상황이 나쁘다. 받아들여야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식이다. 사회 정책, 보건과 안전이나 환경 분야의 분석의 상당 부분이 통제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통제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위협을 느끼게 하지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희망적이며, 희망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

통제 이야기의 변형으로는 “통제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서 다수가 모르게 숨겨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음모의 이야기’(conspiracy story)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악을 고의로 발생시켰거나 회피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포와 도덕적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해온 소수로부터 통제를 회복하자는 호소로 끝을 맺는다. 또 다른 변형은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의 이야기로 아픈 사람이 아픈 이유는 과식했거나, 몸에 나쁜 음식을 먹었거나, 흡연을 하면서 운동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몰락의 이야기는 분노와 좌절을 불러오지만 통제의 이야기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는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몰락의 이야기가 고통을 경고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제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청자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 수사적 장치들을 사용한다. 정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략의 수단으로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3) 예를 들면, 정부의 안전보건 규제에 반대하는 제약회사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적의 약품을 만들어 왔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성장과 혁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취하고자 하는 행위의 맥락으로서의 문제를 창조해내기도 한다. 문제가 실제로 해악이나 파멸을 초래하지 않지만 자신들과 자신들의 기술, 선호하는 행위 방침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다.

Ⅲ. 국가경쟁력 위기와 몰락의 이야기

1. 국가경쟁력 논의의 등장

국가경쟁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었다. 국가경쟁력 논의의 등장 시기는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언론 보도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특히 신문 사설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여론의 향방을 잘 반영한다(정익재·정창무, 1996: 94)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⁴⁾.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신문에 등장한 것은 1990년이었지만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1년에는 5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2,000건을 넘어서고 2004년에는 4,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화에 동반하여 국가경쟁력 개념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길성, 2006: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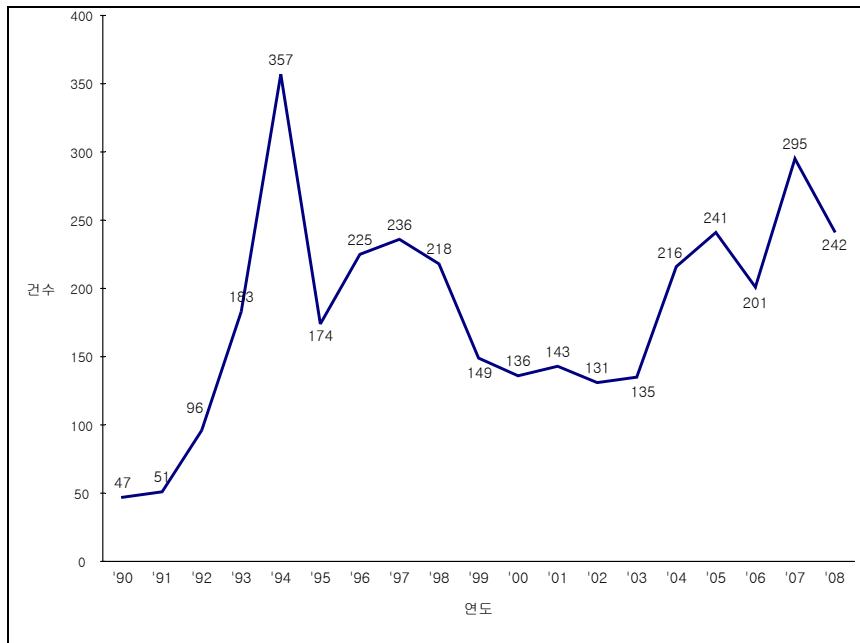
사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199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1994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이후 점차로 감소하여 1999년 이후에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⁵⁾<그림 1>.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08

4) 신문 사설은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신문사의 주장이 담겨 있는 글로 사건 기사나 해설 기사와 달리 문제 해결, 특정 주장이나 행위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사태에 대한 평가나 고발, 관심 촉구와 의식적 각성의 요구, 행동이나 실천의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민병곤, 2000: 133)

5) 사설의 분석 대상 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이다. KINDS(www.kinds.or.kr)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글로벌 경쟁력도 포함)을 키워드로 사설을 검색했다(2009년 1월 17일). 총 3,535건이 검색되었는데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없는 58건을 제외하고 총 3,477이었다. KINDS에 검색되지 않는 조선일보의 경우 홈페이지(www.chosun.com)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했다. 총 1155건의 사설과 칼럼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사설은 총 101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칼럼이 1995년 10월 25일이었던 점에서 그 이전의 사설이 존재하지만 검색기능의 제한으로 검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년까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국가경쟁력에 관한 사설의 건수의 빈도는 역대 대통령의 집권 시기별로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1993. 2 - 1998. 2)와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2003. 2 - 2008. 2)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1998. 2 - 2003. 2)는 상대적으로 논의 빈도가 낮은 시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외환 위기의 상황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첫해인 2003년의 경우 총 135건으로 이전의 3년 동안의 사설건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국가경쟁력 관련 사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에는 295건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경쟁력 관련 사설의 빈도가 집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경쟁력’ 관련 신문 사설 수 변화 추이



도 있다. 따라서 총 대상 사설 건수는 3,578건이다.

2. 국가경쟁력 위기론: 몰락의 이야기

1994년을 전후한 시기에 활성화되었던 국가경쟁력 논의는 2000년대 중반의 국가경쟁력 위기론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의 국가경쟁력 논의가 세계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던 반면 2000년대 중반의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정부혁신이나 경제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⁶⁾.

초기의 국가경쟁력 논의는 기업과 노조, 정부의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와 해결책이 논의되었으며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까지 관심을 가질 만큼(정문화, 1994) 폭넓게 논의되었다.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세계화론은 경제적 자유주의, 시장과 생산제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추세는 불가피하며 세계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의 실현과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당시는 기업의 관점(김상하, 1994)이나 정부의 차원(이용현, 1994; 통신개발연구원, 1992)에서 국가경쟁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또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기피, 노사분규 빈발과 근로 의욕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고임금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 부진과 가격경쟁력 약화, 생산 인력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이원덕, 1992: 135). 비용경쟁력 향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정윤형, 1994) 고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기술자립도 제고,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한 산업 및 경제활동의 효율화와 하부구조의 확충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통신개발연구원, 1992). 그 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6) 이는 국가경쟁력 논의의 출발이 되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의 성격 변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1990년대 중반의 세계화 연구는 한국의 행정과 정책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처방적인 논의에 집중했다. 반면 최근의 세계화 연구는 세계화가 각국의 행정개혁, 정부혁신,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실증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의 세계화 연구가 세계화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소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의 논의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실제로 발생한 행정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화와 행정 간의 관계를 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김선혁, 2008: 8).

내건 많은 공식적 기구들이 기업단체와 정부, 국회 등에 만들어졌다(우천식·서경란, 2003: 4-5).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이전과 달리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 단체나 보수적 성향의 정당과 언론 등에 의해 주도 되었다⁷⁾. 예를 들면,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사설 수는 줄어들었거나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보수적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와 국민일보 등의 관련 사설은 2002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조선, 동아, 문화의 세 신문사의 사설 수가 국가경쟁력에 관련된 전체 사설(316건)의 절반 가까운 46.8%(148건)나 차지했다.

역진성과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감세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최현수, 2002)는 데서 알 수 있듯 국가경쟁력 논의는 경제적 상위 계층이나 대기업에 대체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를 포함한 진보 진영은 국가경쟁력 논의가 자본의 욕망의 결과이며(인물과 사상사 편집부, 2009)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것(김영선, 2008)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경쟁 강화와 규제 철폐 혹은 완화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특히 보수정당과 신문-정당 병행관계에 있는(Seymour-Ure, 1974)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국가경쟁력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⁸⁾.

이들이 주장한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상황의 악화로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전형적인 ‘몰락의 이야기’의 형태를 취하고

7)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상대적일 뿐 아니라 독특한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서구사회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독재 권력 하의 보수는 권력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해 개인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수주의라고 이름 붙일 자격조차 없다. 또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의 결핍(손영준, 2004: 247-248)으로 인해 보수적 기풍이 보수주의 이념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홍윤기, 2002).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수를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통상적으로 보수로 지칭되는 집단을 보수로 부르기로 한다.

8) 신문은 정치적 이해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정치적 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권력집단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권력엘리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신문-정당 병행관계(Seymour-Ure, 1974)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영신, 2008).

있다. 특히 성장보다 균형발전과 분배를 중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저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한나라당, 2004a, 2004b, 2005c; 국민일보, 2003; 동아일보, 2004a; 서울신문, 2004; 세계일보, 2006; 조선일보, 2003b, 2004a, 2007). 이러한 주장은 보수 정당에 의해서도 되풀이 되었다(한나라당, 2004b, 2004d, 2005b, 2005c, 2005d, 2006, 2007). 즉, 국가경쟁력이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국가 재앙'으로까지 묘사하기도 한다(동아일보, 2006).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영웅과 악한, 무고한 희생자를 규정함으로써 악의 힘과 선의 힘 간의 대결의 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이라는 몰락의 이야기에서 악한과 영웅, 무고한 희생자는 각각 정부와 노조, 기업과 국민들이었다. 비대한 정부와 시장 파괴라고까지 표현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는 주장(김영용, 2006; 전경련, 2002a)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한나라당, 2004c, 2005a; 국민일보, 2005; 동아일보, 2004b, 2004c; 문화일보, 2005, 2006; 세계일보, 2005b; 조선일보, 2005a, 2005b, 2006b). 특히 공무원의 인식 부족 및 비협조, 부처기능의 분산과 부처 이기주의와 같은 정부의 문제로 인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전국경제인 연합회, 2003)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의 당사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노조도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와 노사관계를 '강성 노조'와 '후진적 노사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노조와 정부의 노동 규제가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IMD나 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8/2009: 5). 또 이의 해결을 위해서 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국경제인 연합회, 2009: 5)과 노동 규제의 완화 혹은 철폐(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쟁력 위기론에서 악한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분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반면 기업은 국가경쟁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영웅이다. 낮은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인적 자원 경쟁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며 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2a). 그럼에도 정부는 재계의 비명과 호소에 귀 기울이지 조차 않고(조선일보, 2003a)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해 있는 대기업을 정부가 오히려 역차별(전국경제인연합회, 2004)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우리나라를 퇴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문화일보, 2005; 조선일보, 2006b)고 주장했다. 질 낮은 정부와 질 높은 기업(조선일보, 2005b)의 표현처럼 정부는 악한이며, 기업은 영웅으로 묘사되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IV. 위기론과 정책 편향

1. 위기와 문제 표현으로서의 수(number)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정의된 다수의 항목들이 제시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점수가 매겨져 최종적으로 국가간 순위까지 제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는 분명히 사실(fact)이다. 숫자는 그 자체가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 결과에 대해 사람들은 높은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숫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숫자의 의미의 진실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숫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숫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숫자들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숫자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정책문제를 규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문제를 측정(measure)해 보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 논쟁은 문제가 심각하거나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Stone, 1988: 127). 강력 범죄의 발생 건수나 실업률, GNP와 같은 수치들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강조하거나, 수치상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악화 혹은 개선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의 세계에서 측정은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결책을 함축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한 해결책의 선택을 독려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측정과 척도를 장려한다. 정책 논쟁에서 수치는 전략적으로 선택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숫자 자체만큼이나 숫자에 붙은 수식어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의 변화가 단순하게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급격한 상승”이나 “상당한 하락”과 같은 수식 어휘나 상징 혹은 담화적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Stone, 1988: 144-145).

당시 국가경쟁력 위기의 근거로는 IMD나 WEF 등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국가경쟁력 평가가 정책이나 노선에 대한 정당성과 개혁의 논거 혹은 비판의 자원이었던 것이다(박길성, 2006: 192).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한국은 20-30위권대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숫자가 주는 정확성과 객관적 이미지로 인해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상관없이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주장을 입증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국가경쟁력 순위와 함께 문제의 악화를 강조하기 위해 '꼴찌'(한나라당, 2004a), '추락'(동아일보, 2004b; 문화일보, 2004; 조선일보, 2006a)이나 '심각한 추락'(조선일보, 2003b; 한나라당, 2004d) 등의 부정적 수식어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경쟁력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쟁력 위기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위기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근거가 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의문⁹⁾과 단기간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문제¹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차원별 타당

9) IMD와 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는 통계자료에 대한 가중치의 임의적 부과에 따른 자료의 낮은 신뢰성과 답변자의 주관적 판단 배제의 곤란성(최영출, 2006), 상위 순위 국가에서의 과대평가와 하위순위국가에서의 과소평가(IMD)와 국가순위에 관계없는 과대평가 경향과 지나친 연성자료 사용에 따른 강한 주관성(WEF 국가경쟁력지수) 등의 문제(이현재, 2005: 343)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일시하는 오류(황성원, 2006: 14-16)까지 매우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 위기의 와중에서 국가부도를 선언한 아이슬란드의 2007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IMD는 7위, WEF는 23위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은 국가경쟁력 평가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0) 국가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국가경쟁력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같은 급격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매년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 평가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도와 전체 모형의 적합도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최영출, 2009). 국가경쟁력 순위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로는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다. 2008년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IMF의 구제 금융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2007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5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IMD 순위에서는 7위, 13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WEF의 순위 발표에서는 23위였다. 또 WEF와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통계적 분석과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되고 있는데, 설문조사 항목의 조사대상자는 각국의 경영자들로 국가경쟁력 순위 결정에 기업의 견해만이 반영된다. 따라서 기업의 견해가 반영된 국가경쟁력 다시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 위기론을 수용할 경우 당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혼란기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상 당시의 경제 상황은 건실한 편이었다. 연평균 3%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3.5%의 낮은 실업률은 역대의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경제 규모의 증가와 세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표 1>. 또 2002년 12,100 달러였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07년에는 21,695 달러로, 2002년 1,214 억불이던 외환 보유액이 2007년에는 2,622억불로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라고 할 만한 특별한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표 1> 역대 정부별 주요 경제 지표 비교*

정 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GNI 증가율	경제성장률
전두환	2.8%	3.8%	11.5%	10.5%
노태우	7.4%	2.5%	17.6%	8.4%
김영삼	5.0%	2.4%	9.3%	7.1%
김대중	3.5%	5.0%	0.7%	4.5%
노무현	3.0%	3.5%	11.6%	4.3%

* 각 지표는 집권 기간 중 연평균 비율임

자료: 통계청(<http://www.nso.go.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를 참고로 작성

2. 국가경쟁력 위기론과 정책 편향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은 이데올로기로 승격되었으며 경쟁의 본질도

규제된 경쟁(governed competition)에서 시장 일방적인 초경쟁(hyper-competition)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개념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박길성, 2006: 174).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세계화론은 첫째, 세계화는 무한적 세계경제 전쟁이다. 둘째, 이 경제 전쟁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두 개의 길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영합게임(zero-sum game)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가치이다. 넷째,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임금 체제를 억제해야 하고 노사관계를 최대한 안정시켜야 한다. 여섯째, 언어나 실무 능력과 같은 개개인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박형준, 1994)는 등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¹¹⁾(김천기, 1994). 세계화 논리와 함께 등장한 국가경쟁력이 정부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친기업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도 국가경쟁력 옹호론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해법으로 친시장적 정책을 지지한다(박길성, 2006: 189).

실제로 위기로 부를만한 특별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제기된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이를 지지하고 활용하려는 세력의 정치경제적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신자유주의적 친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기업 성장=국가경쟁력 강화=국가발전', '기업 활동 저해=국가경쟁력 약화=국가적 쇠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 자유화 → 국가경쟁력 강화'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위기의 해결책은 작은 정부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 추구를 통한 기업 활동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었다(정진호, 1997).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 결과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근거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의 강화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

11)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는 자연발생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지배적 사회집단들에 의해 추진된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비판도 있다(Rupert, 2000: 42). 따라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도 존재하며,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와 저항 세력을 억압하는 경찰과 군사력의 동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Cox, 1996: 23)이 제기되기도 한다(강민, 2002: 424).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필연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전국경제인연합회, 2002b)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보수 정당도 이들과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잠식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불합리한 경제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출자 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의 규제개혁을 지지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2b).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위기의 책임이 정부나 노조 등에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경제자유화의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몰락의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 정부와 노조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갔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정부 정책의 지향을 경제자유화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노동유연화 정책은 국가경쟁력 위기론에 근거한 기업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건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국가경쟁력 강화 분과회의’, ‘국가경쟁력점검 소위원회’ 등의 공식기구가 설치되기도 했다. 또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부각을 통해 정부와 노동조합 등을 기업 활동과 국민의 높은 수준의 경제 생활, 나아가서는 국가적 번영을 저해하는 ‘악한’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친기업적 정책이 선호되는 유리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

V. 맺는 말

국가경쟁력의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은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국가경쟁력이 국가전체의 이익 혹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모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경쟁력이 사용되는 맥락과 의미를 고려해볼 때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할 경우 국가경쟁력은 특수한 측면보다는 전체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동일시하는 국가경쟁력 논의는 규제 철폐와 경제자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친기업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철폐와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은 정부에 의한 규제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 개혁마저도 재벌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가능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이인권·황인학·서정환·한현욱, 2003)고 주장해왔다. '몰락의 이야기'로서의 국가경쟁력 위기론에서 제시된 '특별한 조치'도 기업에 대한 감세나 규제 완화 혹은 철폐와 경제자유 확대였다(예: 한나라당, 2004c, 2005a).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와 친기업적 세력들에 의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무조건적인 친기업적 경제 자유화를 반대하는 단체나 기업과 대척점에 있는 노조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은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유도와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개념의 확산의 부정적 이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우위를, 노동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상대적 특권을 합리화함으로써 정부-기업-노동간의 수평적 관계망에서 기업의 주도적 지위와 특권을 수용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경쟁력 위기론이 국가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당화시키고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간과되어 왔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몰락의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 정부를 악한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확산을 통해

쇠퇴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와 정부의 규제에 책임을 귀결시킴으로써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분과적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국가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쟁력 개념이 분과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과 숙고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작은 정부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 담론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본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은폐·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자본주의적 경쟁을 정당화하고 이를 규범으로 강제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동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다는 것이다(정성진, 1994). 이러한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위기론은 친기업적인 편향된 문제 인식과 정책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증폭시킴으로써 정부의 역할과 존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치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 것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부가 최소한의 공공부문의 역할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¹²⁾.

둘째, 국가경쟁력이 특정한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에 따른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고정된 의미 해석에 따른 갈등을 차단하고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집단이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규정과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되는 경우 국가경쟁력은 ‘국가적 수준 혹은 차원의 경쟁력’이 아니라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소수를 위한 경쟁력’으로 치환되어 버릴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반영된 국가경쟁력의 강조는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보수와

12) 시장주의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옳은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장모델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부문의 역할조차 망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이정우, 2005: 290)

진보간의 갈등도 국가경쟁력 위기론에 의해 조성된 사회적 상황과 정책 편향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국가경쟁력 위기론에서 주장하는 정부 책임론은 인과적 관계에 대한 무리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오류가 특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국가중심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수혜자인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전환점으로 급속하게 시장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일까에 대한 회의도 존재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기책임도 자각되어야 한다(박영주,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위기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를 경우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조현승·김대욱, 2005: 4)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친기업적 정책 변화가 곧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영화나 규제철폐가 경쟁력 있는 국가의 유일한 정답도 아니다.

넷째, 국가경쟁력 위기론에서의 문제 규정과 정책적 대안은 심각한 정책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규제나 정부의 문제는 강조하는 반면 기업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문제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재무구조의 투명성, 회계기준, 주주의 권리, 성의 평등성 등과 같은 기업의 문제도 있다(이형근, 2003; 조현승·김대욱, 2005: 9). 또 기업들은 조세 제도 개선과 같은 기업경영환경개선과 정부규제 완화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 개혁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지만 복지·환경 정책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2c).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주장(김상하, 1994: 9)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요한 기업의 문제가 교정되지 못하거나 기업 경쟁력과 무관한 복지나 환경 문제 등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편향이 아닌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경쟁력의 강조는 경제가 모든 인간

의 정신적 가치까지 간섭하는 ‘수단-목표의 대치’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체로 보고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향된 의미로 해석될 경우 기업에 우호적인 행위는 정당화되는 반면 이에 반하는 다양한 가치와 입장의 정당성은 왜곡되고 그 근간이 축소되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경쟁력’을 ‘산업경쟁력’의 동의어로 협소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국가 전체 차원의 거버넌스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의할 경우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개념화,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경쟁력 개념 성립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참고문헌

- 장 민. 2002. “한국의 세계화론: 편향된 존재론, 편협한 인식론, 방법론의 족쇄, 그리고 권력의 물신화.” 《한국정치학회보》 36(3): 421-441.
- 고영신. 2008. “시사만화의 정치적 의제설정과 프레임 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6(2): 37-73.
- 《국민일보》. 1998. “날로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3월 25일: 3.
- _____. 2003. “뒷걸음치는 국가경쟁력.” 12월 18일: 22.
- _____. 2005. “정부 경쟁력 하락 그만한 이유 있다.” 9월 7일: 30.
- _____. 2006. “정부가 경쟁력 추락 주도했다니.” 5월 12일: 5.
- 《경향신문》. 1994. “벼랑끝에 선 국가 경쟁력.” 9월 8일: 3.
- 김상하. 1994.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제고방안.” 《저스티스》 27(1): 9-18.
- 김선혁. 2008. “세계화와 행정: 이론적 성찰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42(1): 7-25.
- 김영선. 2008. “경제위기 이후 경영담론내 휴가담론의 성격에 대한 시론.” 《노동연구》 16: 53-80.
- 김영용. 2006. “경제규모(GDP) 12위국으로의 추락이 갖는 의미와 평가.” 《월간전경련》 503.
- 김정민·전영서. 2001. “기술적 효율성에 근거한 국가경쟁력 측정에 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9(2): 105-127.

- 김천기. 1994. "국가경쟁력 강화정책과 교육불평등의 심화." 《교육사회연구》 4(1): 61-83.
- 김형기. 2003.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동향과 전망》 59: 62-92.
- 김형렬. 1987.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8: 65-87.
- 노화준. 1991. "위기발생의 의사결정 경로와 위기관리." 《행정논총》 29(1): 122-145.
- 《동아일보》. 2003. "국가경쟁력 좀먹는 勞使갈등." 5월 13일: 2.
- _____. 2004a. "국가경쟁력 이대로 둘 것인가." 5월 6일: 2.
- _____. 2004b. "'국가경쟁력 추락' 정권 책임 가장 크다." 10월 15일: 2.
- _____. 2004c. "'평등' 깃발 아래 추락하는 경쟁력." 8월 12일.
- _____. 2004.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부산 항운노조." 3월 30일.
- _____. 2006. "한나라 "국가경쟁력 추락은 정권무능 때문"." 5월 11일.
- 《문화일보》. 2004. "현정부 들어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10월 14일: 27.
- _____. 2004. "과거 성적 까먹는 현 정부의 경쟁력." 9월 6일: 31.
- _____. 2006.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5월 11일: 31.
- 민병곤. 2000. "신문 사설의 논증구조 분석." 《국어국문학》 127: 133-154.
- 박길성. 2006.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 7(1): 173-200.
- 박선희. 2002.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에 대한 담론분석: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5(1): 209-248.
- 박영주. 2006. "정부, 기업, NGO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방향: 동조성 대 상충성을 중심으로." 《NGO연구》 4(1): 109-136.
- 삼성경제연구소. 1994.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신문》. 1994. "충격준 우리의 국가경쟁력." 9월 8일: 3.
- _____. 2004. "11단계나 추락한 국가경쟁력." 10월 15일: 31.
- 서창록. 1993.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산업정책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27(4): 1361-1378.
- 《세계일보》. 1997.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3월 27일: 3.
- _____. 2005a. "정부 肥大化론 경쟁력 못 높인다." 2월 26일: 27.
- _____. 2005b. "DJ 정부보다 추락한 정부 경쟁력." 9월 7일: 35.
- _____. 2006. "우려되는 국가경쟁력 추락." 5월 12일: 23.
- 손영준. 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2): 240-266.

- 우천식·서경란. 2003.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정책적 함의: IMD 및 WEF의 평가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SERI)/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주최 심포지움.”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 논문. 2003. 6. 27.
- 윤광재·김택·김태영·박태형·김영우·최승범. 2004.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윤상오. 2000.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47-71.
- 윤희윤. 2007. “OECD 국가경쟁력 및 연구경쟁력의 상관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105-123.
- 이영면. 2004. “국가 경쟁력과 노사관계 생산성 제고 방안.” 《생산성논집》 18(1): 99-125.
- 이용현. 1994. “국가경쟁력문제의 실상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28(1): 285-304.
- 이원덕. 1992. “우리나라 임금의 구조적 문제점과 임금정책의 방향.” 《산업관계연구》 2: 129-139.
- 이인권·황인학·서정환·한현욱. 2003.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 인식과 정책의 전환.” 《규제연구》 12(1): 189-221.
- 이정우. 2004.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 참여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경제학연구》 53(4): 279-311.
- 이현재. 2004. “구성분분석에 의한 IMD 및 WEF 국가경쟁력지수 평가.” 《국제지역연구》 9(2): 330-345.
- 인물과 사상사 편집부. 2009. “국가경쟁력” 개념에 실체가 있는가?.” 《인물과 사상》 131: 152-153.
-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과제.” 《전경련 보도자료》 1999. 8. 5.
- _____. 2002a.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 인식과 정책의 전환한국의 국가경쟁력 세계 최고 국가의 절반 수준, 주요기업 CEO 평가 - 기업 및 경제기반 부문 비교적 우수, 공공 및 인적자원 부문은 매우 열악.” 《전경련 보도자료》 2002. 6. 20.
- _____. 2002b. “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보도자료》 9. 17.
- _____. 2002c. 《차기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우선과제》.
- _____. 2003.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과제.” 《CEO Memo》 2003-4.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 _____. 2003. “자산5조원 규제에 대한 공정위 논거는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전경련 보도자료》 2004.8.9.
- _____. 2008.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시리즈 4》.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 _____. 2009. "사회갈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Issue Paper》 165.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수봉. 2004. "2004년 IMD 국가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 정광조. 2004.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그 함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6: 101-120.
- 정문화. 1994. "개혁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통일운동에 주력하겠다 《월간 말》 91: 69-71.
- 정성진. 2004.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경제와 사회》 64: 84-117.
- 정윤형. 1994. "우루과이 라운드와 국가경쟁력." 《동향과 전망》 21: 5-12
- 정익재·정창무. 1996.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신문 사설 내용 분석." 《한국행정학보》 30(1): 93-112.
- 정진호. 1997.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정진홍. 1991.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상의 통념화된 편견과 <비판> 개념: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상의 지적 위기에 대한 비판 연구자의 반성적 소고." 《신문학보》 26: 315-344.
- 조병구. 2006.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 IMD·WEF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조선일보》. 2003a. "세계의 비명과 호소에 귀 기울여라." 9월 17일.
- _____. 2003b. "우리의 국가경쟁력 어디까지 추락하나." 12월 16일.
- _____. 2004a. "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5월 5일.
- _____. 2004b. "경쟁력 추락을 보고서 탓으로 돌리는 정부." 10월 15일.
- _____. 2004c. "집권당은 국민이 먹고 살 방안을 제시하라." 4월 5일.
- _____. 2005a. "한국경제 흔들어진 법적·정치적 불안정." 9월 6일.
- _____. 2005b. "質 낮은 정부, 質 높은 기업." 7월 15일.
- _____. 2006a. "'逆 발상' 정부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추락한 한국." 5월 10일.
- _____. 2006b. "정부·노조·교육시스템이 대한민국 後退시켜." 9월 27일.
- _____. 2007. "국가경쟁력, 한국은 기고 중국·인도는 뛰고." 5월 10일.
- 조현승·김대욱. 2004. "국가경쟁력의 현주소와 강화방안." 《KIET 산업경제》 2005년 11월: 3-12.
- 최영출. 2006.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국가경쟁력 요인분석." 《한국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7(2): 171-189.
- _____. 2009. "국가경쟁력 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0(3): 41-63.
- 최진욱. 2006.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5(1): 3-25.
- 최현수. 2002.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감세정책의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 147-176.
- 통신개발연구원. 1992. 《정보통신과 국가경쟁력(1)》.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 《한국일보》. 1996. “떨어지는 국가경쟁력, 5월 26일: 3.
- _____. 2003.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12월 18일: 31.
- 한나라당. 2004a.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꼴찌라니.” 《대변인브리핑》 5월 5일.
- _____. 2004b. “추가폭락! 이유있다.” 《대변인브리핑》 5월 19일.
- _____. 2004c. “경제, 이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다.” 《대변인브리핑》 5월 23일.
- _____. 2004d. “심각한 국가경쟁력 추락, 노정권 정신차려야.” 《대변인브리핑》 10월 14일.
- _____. 2004e. “경제 살리기, ‘길을 두고 왜 돌아가는가?’.” 《대변인브리핑》 12월 8일.
- _____. 2005a. “이렇게 하면 경제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대변인브리핑》 1월 26일.
- _____. 2005b.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 비상시국에 대처하라.” 《대변인브리핑》 2월 24일.
- _____. 2005c.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요?” 《대변인브리핑》 4월 18일.
- _____. 2005d. “앞으로 10년, 한국경제는 회색빛이다.” 《대변인브리핑》 8월 29일.
- _____. 2005e. “국민의 경제전념 요구가 간교하다고요? 《대변인브리핑》 9월 28일.
- _____. 2006. “경제활성화 대책 논의 총리골프 거짓말 아닌가?” 《대변인브리핑》 3월 3일.
- _____. 2007. “꼴찌 대통령이 만든 꼴찌 경제 성적표.” 《대변인브리핑》 1월 30일.
- 홍윤기. 2002.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 - 보수 - 관계’의 작동과 그 한국적 상황 - ‘진보-보수-담론’의 성립 조건에서 본 한국 정치문화의 부실성.” 《사회와 철학》 4: 15-50.
- 황성원 외. 2006. 《정부혁신 성과지표 개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Berger, P.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Anchor.
- Choi, Chong Ju. 1999. Glob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Attractiveness: Preface.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29(1): 3-13.
- Cohen, Abner. 1976. *Two dimensional man; An Essay on the Anthropology of Power and Symbolism in Complex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ox, Robert W. 1996. "A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In Mittelman, J. H. ed., *Globalization: Critical Reflections*. London: Lynne Rienner.
- Davies, Howard and Paul Ellis. 2000. "Porter's Competitiveness Advantage of Nations: Time for the Final Judge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7(8): 1189-1213.
- Evans, Peter. 1976.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rald, J. R., Y. J. Lee, D. H. Jeong, and Kim, H. 1998. "A Strategic Framework for Corporate Crisis Management." 《한국경영학회, 98년도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249-260.
- Ulmer, Robert R. and Timothy L. Sellnow. 2000. "Consistent Questions of Ambiguity in Organizational Crisis Communication: Jack in the Box as a Case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25: 143-155.
- Jackson, Robert, J. 1976. "Crisis Management and Policy-Making: An Explo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In Rose, Richard. ed.,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Beverly Hills, CA: SAGE Publishing, Inc.
- Kim, Linsu. 1998. "Crisis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Building in Catching-up at Hyundai Motor." *Organization Science* 9(4): 506-521.
- Krugman, Paul. 1994.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73(2): 28-44.
- Nimmo, D. and J. E. Combs. 1990. *Mediated Political Realities*. NY: Longman.
- Pitt, M. 1990. "Crisis Modes of Strategic Transformation: A New Metaphor for Man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overidge, R. and Pitt, M. (eds.). 1990.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 Porter, Michael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London: Macmillan.
- Rupert, Mark. 2000. *Ideologies of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 Seymour-Ure, C. 1974. *The Political Impact of Mass Media*. London: Sage
- Stone, Deborah A. 1988.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